第266回國會
(臨時會)

# 民族和解와 繁榮을 위한 南北平和統一特別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7年3月23日(金)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남북관계 주요현안 보고

**審査된案件**

1. 남북관계 주요현안 보고 ····· 1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배기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민족화해와번영을위한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북핵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3일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9·19 공동성명'의 초기조치 이행계획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고착상태에 빠졌던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고,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중단되었던 쌀·비료 지원,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면회소 건설공사 등 남북 간 각종 교류협력사업 재개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일 개막한 제6차 6자회담은, 북미 간 최대 현안이었던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자금동결 문제가 원칙적으로 타결되기는 하였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흘째 파행되다가 휴회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남북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여러 가지 상황별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의 남북관계 상황 변화와 정부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과 함께 남북 현안문제에 관하여 건설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1. 남북관계 주요현안 보고

(14시07분)

**○위원장 배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북관계 주요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존경하는 배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계기로 위원님들을 뵈었습니다만 오늘은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퍽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남북관계 상황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는 이 시간, 여러분께서도 아무쪼록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 가는 데 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 8월 이후 한반도 정세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때 북핵실험과 유엔의 제재결의로 한반도 상황이 대단히 악화되었지만 한미 공조와 북미 양자 접촉 등의 노력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기조를 회복한 이후 북핵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남북대화를 6자회담 틀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결과 7개월간 중단되었던 남북 당국 간 관계를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아울러 '2·13 합의'를 남북이 협력하여 원만하게 이행한다는 데에도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가 서로 선순환 관계 속에서 병행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현안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남 혁신재정기획본부장입니다.

고경빈 정책홍보본부장입니다.

김중태 남북경제협력본부장입니다.

양창석 사회문화교류본부장입니다.

박홍렬 개선공단사업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2007년도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주요현안으로서 북핵 문제 그리고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후속조치 이행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7년도 대북정책 추진방향은, 북핵 폐기 과정과 북미 관계 정상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국면을 충분히 살려서 남북 간에도 제20차 장관급회담 개최로 7개월 만에 남북대화가 복원되고 중단된 인도적 사업 등을 재개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을 진단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전환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충실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기조로는, 북한 핵 폐기를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영역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원칙과 신뢰를 형성하여 평화번영의 기조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책추진 방향으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여 6자회담·남북회담을 병행 추진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화해협력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호혜적·중장기적 협력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며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인도적 현안의 근본적 타결을 추구하면서 대북지원은 인도적 원칙하에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입니다.

남북 간 신뢰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북이 합의한 것은 지킨다는 원칙과 신뢰의 토대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역량 내실화를 위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정책의 대내외적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북정책의 당위성, 비전 등 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평화교육을 통하여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함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현안입니다.

먼저 북핵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천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시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사항의 이행 가속화에 대한 남북 간 공동인식을 담은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북측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우리 측 수석대표 면담 시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임을 강조하면서 핵 문제 해결노력의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2·13 합의' 이행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6차 6자회담 및 5개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참가국 간 '2·13 합의'의 구체적 이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지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우리 측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에서 초기단계 5만t 중유지원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합의 이행의 가속력과 이행력을 제고해 나간 바가 있습니다.

북미 간 최대 현안이었던 BDA 문제가 원칙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 합의' 이행 시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영변 핵시설 폐쇄, IAEA 사찰관 복귀, 신고 및 불능화 조치 이행 등을 위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위한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합의·이행됨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0차 장관급회담 후속조치 이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적 사업의 재개입니다.

적십자단체 간 실무접촉이 지난 3월 9일 금강산에서 열려서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재개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준비인력 45명을 우선 투입하여 지난 3월 21일부터 공사 재개에 들어갔으며, 3월 말까지는 추가인력을 100여 명으로 늘려서 투입하고 장비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지 상주인원으로서 남측에 3명, 북측에 4명으로 현지 연락체계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산가족 화상 및 대면상봉 실시와 관련해서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으며,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남북 각 60가족, 총 861명이 참가하는 제5차 화상상봉을 이번에 시행하도록 하고,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 100가족, 약 1000명의 가족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8차 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여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국군포로·납북자들의 생사확인 및 상봉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후 납북피해자지원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을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북 비료지원입니다.

북한적십자사는 한적총재 앞 전통문을 통해 비료 30만t 지원을 지난 3월 7일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비료지원이 북한의 식량생산성 증대 및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인도적 차원의 비료지원 결정을 바로 어제 3월 22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하였고,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내는 비료의 종류와 규모는 복비, 요소 및 유안 등 총 30만t 규모로서 지원시기는 현재 3월 27일경 첫 항차를 출항시킬 계획으로 있고, 가급적 시비시기에 적절히 맞출 수 있도록 해로를 통해서 전량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 및 8·15 공동행사입니다.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6·15 및 8·15 공동행사에 당국이 적극 참여하여 남북 간 화해·협력을 촉진하도록 하며, 6·15 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서 6·15 공동행사는 평양에서 8·15 공동행사는 남측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지난 3월 9일 중국 심양에서 합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올해 공동행사 시에 노동·농민·교육 등 부문별 행사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동행사의 개최기간, 행사 내용, 대표단 규모 등 세부계획은 향후 진행될 6·15 민족공동위원회 실무협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이러한 행사들과 함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 추세 아래에서 북한 청소년대표팀 전지훈련이 지난 3월 20일부터 시작되어서 4월 20일까지 한 달간 계속될 것이고, 세계 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북측의 30명 선수단이 4월 2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 머물 예정이고, 장웅 IOC위원 및 태권도시범단이 역시 4월 6일부터 9일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런 모든 남북교류 활성화는 앞으로 여러 면에서 좋은 결실을 가져오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열차 시험운행입니다.

제20차 장관급회담에서 열차 시험운행을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남북은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을 지난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여 상반기 중 열차 시험운행 실시와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 실무회의에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개시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열릴 경추위 제13차 회의에서 적절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상반기 중 열차 시험운행 실시와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주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3차 경추위 회의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에 진전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활성화 계획입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22개 기업이 입주해서 가동중에 있으며, 점차 가동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월 한 달간 생산액은 1196만 불로 크게 증가하였고, 총 생산액은 1억 불을 돌파했으며, 지금은 남북 근로자가 1만 300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공단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 3월 14일에 신청을 마감한 결과 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들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입주자 선정을 하고 계약한 후에 8월부터 32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할 예정입니다.

1단계 잔여부지 53만 평에 대해서는 토공이 4월 말경 추가분양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일반공장, 아파트형공장, 협동화단지 외에 선도기업, 외국기업 유치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수와 전력, 폐수처리 등 인프라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 부지조성 토공사는 완료하였지만 여타 기반시설 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이런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2단계 개발착수는 1단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등 제반 상황과 함께 시장상황을 검토하면서 시기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올해 하반기에 사전준비를 위한 부지 측량·지질조사를 먼저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개성공단에 대한 국내외 시각이 현재 여러 면에서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의 희망적 미래'라고 하는 무디스 대표단의 의견 표명이나,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미래'라고 한 페리 전 국방장관의 말씀이나, 또 '개성공단은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한 주한 EU상공회의소 대표의 표명 등은 우리들에게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개성공단을 앞으로 더욱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엽 위원** 한나라당 소속 강원도 강릉 출신 심재엽 위원입니다.

어저께 6자회담 해프닝 벌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남북장관급회담도 실패작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료 첫 선적이 27일로 잡혀 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심재엽 위원** 통일부에서 2·13 합의라든가 남북장관급회담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에 비료 주는 문제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이 '북한은 골치 아프고 알 수 없는 집단이며 2월 13일 합의는 깨지기 쉬운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들으셨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통일부장관께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이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장관급회담이 실패다' 이렇게 평가하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회담은 적어도 7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회담을 정상화시키고, 모든 각종 회담의 일자를 정하고 의제를 정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심재엽 위원** 남북장관급회담이 실패했다는 것

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리고 송 장관께서 발언하신 내용들도 사실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봐야 그 진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했다고 단순하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BDA 자금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다만 기술적으로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6자회담의 6차 회의를 어떤 결론을 못 냈습니다마는……

**○심재엽 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액면 그대로 북한은 골치 아픈 집단이고 2월 13일 합의는 깨지기 쉬운 과정이라는 표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통일부장관께서는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심재엽 위원** 지금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전쟁포로 문제 이 두 부분을 주로 얘기했고, 군사적인 긴장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리고 열차 시험운행에 관련해서는 군사적인 보장장치가, 이 부분은 3월 14일 경추위 때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합의가 실패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실패보다는 군사보장이라든가 열차 시험운행에 대한 원칙적인 인식은 같이했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느냐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엽 위원**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되었던 열차 시험운행이 3월 14일 경추위 때로 다시 미뤄지면서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 이산가족 대면상봉이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음 경추위 재개시점이 언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4월 18일부터 경추위 회의가 열립니다.

**○심재엽 위원** 제가 실패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경추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합의가 되고, 4월 18일 경추위 결과에 따라서 북한에서 5월 9일부터 14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이산가족 대면상봉도 실시 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실패작이라고 하는가 하면 북한에 확실한 경제적이라든가 지원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것이 전연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관급회담이라는 것은 결국은 끌려 다닌다거나 눈치본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료 30만t에 대해서 1차 선적은 3월 27일 하고 뭔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잘 보이려고 하고 비위를 맞추려는 측면이 보입니다. 8월 15일 정상회담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13 합의라든가 남북장관급회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데도 서둘러 비료지원을 한다든가 이러는 것은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분위기를 띄우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산가족 대면상봉도 5월 초로 이미 장관급회담에서 합의가 되었던 일이고요, 다만 날짜만 5월 9일로 안 잡은 것이지요.

**○심재엽 위원** 그런데 4월 18일 경추위에서 북한이 달라는 것을 제대로 안 준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도 합의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재엽 위원** 이미 열차 시험운행이 3월 14일 경추위 때 제대로 합의가 안 되니까 다시 무기연기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기로 합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사실상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원래 장관급회담에서 열차 시험운행에 대한 것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하도록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실무급회의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엽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2월 13일 합의라든가 남북장관급회담 결과가 사실 예전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그런데도 지금 비료 30만t을 1차 선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관회의도 경추위와 꼭 연계되어서 경추위에서 제대로 지원이, 합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장관급

회담에서 약속되었던 것이 파기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3월 14일 경추위 때 제대로 안 되니까 열차 시험운행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료를 이렇게 급히 선적해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또 다른 분위기 조성이, 복선이 있는 것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도 강원도 출신이니까 아마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비료는 시비하는 시기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월 28일 선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이미 한 달간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 관계를 위해서 기왕에 지원해 준다면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모든 문제가 정상회담과 관계 있다거나 하는 것은 지나치신 억측이고 전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심재엽 위원** 그리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 마치 인질범에게 우리 인질로 되어 있는 분을 돈을 주고 모셔오는 그런 보도가 일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돈이나 현물을 주고 모셔오는 회담이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 부로서는 전혀 그런 구상과 논의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어디서 어떻게 소스를 잡아서 보도가 되었는지 저희도 상당히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 10일에 적십자사가 모이게 되면 1차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지 그런 문제까지 논의하거나 구상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재엽 위원** 우리 정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 4월 10일 일단 1차회담을 마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들을 논의해서 성안이 되면 다음 회의쯤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하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보고에 의하면 비료 30만t이 10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심재엽 위원**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의 2500만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억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돈일 수도 있고. 그런데 북한이 이 돈에 이렇게 목을 매고 어저께 이 돈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돈이 현실적으로 북한에 큰돈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북미 간에 관계정상화를 하기 위한 북미 워킹그룹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액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측에서 미국의 어떤 조치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심재엽 위원** 보도에 의하면 중국 은행장이 이거에 관련되어서 어떠한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의 있게 이 돈을 인출하게끔 조치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현재 6자회담은 끝났습니다마는 6자의 관련국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고요, 아마 이 문제는 조속히 기술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심재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송민순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저는 이분이 6자회담 우리 대표로도 활동했고, 또 외교관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말실수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산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한 얘기인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맥락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2·13 합의가 깨지기 쉬운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것을 잘 실천하게 해서 9·19 합의와 2·13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송 장관님의 말씀의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하거나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남북대화나 6자회담 내부의 분위기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송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6자회담의 논의 구도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여러 주변 국가들과 함께 논의를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합의도 어렵지만 합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북측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면에 이해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회담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서로 충분한 이해가 못 된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렵다는 뜻으로 표명한 것이지 다른 의도로 송 장관이 표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병문 위원** 하여간 우리 국민이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언론에 어떻게 보도될 것이며 국민이 갖는 우려와 걱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BDA 자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보도는 황당한 것이고, 정말 전혀 양측이 준비하지 않은 데서 오는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중국 은행이 빨리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안 되었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이 자금 처리를 북한에 가 있는 한국의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보내는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관련 보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은행에 요청을 했는지 하는 문제를 저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BDA 자금을 우리은행 쪽에 이체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은행에 북측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과연 우리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은행 측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또는 좋다 나쁘다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현 단계에서 저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었는지 하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다만 보도만 본 일이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어제까지 그 자금이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국제 간의 외환처리에 있어서 무슨 과정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역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국별 간 사전조정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회담 당사자들도 실제로 외환처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지병문 위원**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의 일을, 그리고 6자회담이 그동안 BDA 문제를 하루이틀 다룬 게 아닌데 정말 기술적인 문제를 대비 안 했다면 문제라고 보거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알기로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며칠 기다려 보시면 결과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병문 위원**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말 규모도 키우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나라 제품으로 볼 것이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개성공단의 예는 국제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외생산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역외생산하는 경우에 원자재 몇 %가 들어가서 생산해 내느냐, 생산해 낸 것이 내수로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그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개성공단은 FTA의 원칙에서 본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북쪽 땅에 있기 때문에 원산지, 다시 말해서 역외가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정치적 논쟁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앞으로 한미 간에 절충을 잘한다고 하면 좋은 방향의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병문 위원** 앞으로 절충할 문제가 아니고 다음 주에 결판지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주 30일까지는 끝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안 되면…… 한 때 정부는 한미 FTA 결렬되더라도 이것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통일부의 입장은 적극적으

로 한미 FTA에서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안 됐을 경우에는 안 된 대로 또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FTA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헌법처럼 한 번 정해 놓으면 아주 고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또 수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 후에 또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렇게 되지 않을 건데요. 만약에 개성공단 제품이 FTA에서 우리나라 제품으로 안 됐을 경우에 정부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내용과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 비준 과정이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 볼 때 비준 자체 또는 협상 타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대책을 세운다 그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개성공단 문제는 어떤 기계적 해석을 할 일이 아니고 정말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아주 절대적인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간의 발전 또는 이번의 북핵 문제의 해결, 6자회담의 진전 이런 것과 다 연관해서 해석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지병문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미국도 역시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이 가지는 어떤 가치 또 개성공단이 가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어떤 기여, 이런 문제들을 좀더 고려를 한다고 하면 아마 충분히 좋은 방향의 결론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낙관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상 FTA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될 것이고, 관철될 수 있다고 저희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지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대북지원과 동시에 국군포로 문제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모 언론지에 포로 5명이 탄광이라든가 산골 오지에서 그야말로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런 것이 공개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정말 슬픔, 분노, 참혹함에 대한 이런 것을…… 아마 장관님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한 내에 생존하고 있는 우리 국군포로 대략 몇 명쯤 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문제는 실제로 북측과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추정하는 숫자와 실제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숙 위원** 추정 수는 대략 얼마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국군포로에 대한 것도 여러 계층이 있어서 정전협정 과정 속에 포로 송환 대상에 들어 있었던 사람과 들어 있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다면 상당수가 됩니다만 저희가 대체로 지금 추정하는 것은 한 4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영역을 다 합한 겁니까, 숫자 400여 명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더 많을 텐데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대략 과거에 분단될 당시에 따진 게 한 8만 7000명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변화도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따지는 것은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0~500명선 그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쨌든 6·25로 인해서 우리 국군이 포로로서 가서 있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시겠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이재정** 사실상 이것은 국방부에서도 일정한 정도 파악은 돼 있고 이게 파악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북측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협상을 해서……

**○김영숙 위원** 그것은 물론이지요. 지금 파악이

중요하지 않다 했는데 파악을 해야 뭐가 해결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단 1명이 있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파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파악이 돼 있는 것은 돼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김영숙 위원** 지금 호혜적 협력과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비료 30만t, 한 1080억 원 규모지요, 27일 첫 출항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대북지원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런 인도적 지원을 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동시에 국군포로 송환을, 같이 맞바꾸는 것으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이 국군포로 문제를 그렇게 상호주의처럼 바꾸고 뭐 하는 그런 원칙보다도 현재는 북측과 국군포로 문제를 원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원칙이 먼저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4월 10일부터 열리는 그 회의에서 우선 그런 논의의 단초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비료도 지원하고 식량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원을 할 때 그야말로 남한에 이산되어 있는 부모라든가 형제 친척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도 배고픔하고 똑같거든요. 우리의 고통, 북한의 배고픔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북지원을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원칙을 합의할 때 이것이 원칙으로 존재하게끔 합의를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무작정 '국군포로 주시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는 국군포로 송환이나 납북자 송환의 문제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로서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원칙을 세워나가면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대북지원과 동시에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8차 적십자회담이 금강산에서 4월 10일에 있지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중점 협의할 예정이라 그랬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때 어느 정도로 합의를 이루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게 첫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 어떤 합의를 어떻게 이뤄낸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은 너무 빠르고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협상 과정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가 60년 이어온 겁니다, 국군포로 상황이 벌어진 거는요. 그렇다면 오륙십 년이 지난 것인데 지금 첫 회의라고 해 가지고 아직 뭐 어느 정도라든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북지원이 지금 막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서 국군포로 5명이 오지에서 그렇게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실상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아까의 아픔, 고통, 배고픔, 이거와 마찬가지로 다뤄야 된다고 볼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첫 회의가 열리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협상 이전에 밝히는 것은 협상을 위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 얘기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의 얘기입니다. 잘 이루어지도록 협상이 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 분야에 있어서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으로 어떤 규모로 설치를 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면회소 건설은 본래 금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상봉을 하던 행사를 좀더 상시 상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대체로 그 시설은 대략 1000명 정도가 숙박을 하면서……

**○김영숙 위원** 어디에, 위치를 얘기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금강산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금강산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전에도 면회소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설치해야 된다 하고 주장한 때가 있었거든요. 비무장지대 가까운 데, 금강산만 아니고 우리 쪽도 항상 할 수 있게 그것을 제가 제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한다 그러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145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건설인력입니다.
**○김영숙 위원** 장비하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김영숙 위원** 이것이 설치되는 것은 저는 희망을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추위 제13차 회의에서 남북열차 시험운행이 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경공업 원자재 제공하고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개시 시점에 이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김영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이견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관급 회담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열차 시험운행을 한다고 했고 경공업,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시한이 사실상 지난번 경추위 합의문에 보게 되면 일단 열차 시험운행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를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좀 이견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늦어도 4월 18일 열리는 제13차 경추위까지는 이 문제가 아마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영숙 위원** 남북철도가 개통이 된다는 것, 정말 참 반가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남북 물류운송이라든가 나아가서 유라시아철도와 연결하는 대륙철도 중장기계획도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러한 것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 의견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시험운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단계적으로라도 개통이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TSR, TCR 이런 넓은 대륙과 연결되는 철도망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경제에 효율적으로, 그 상승효과를 위해서는 지금 보면 서울과 수도권철도가 전기기관차, 전기기관을 사용해 가지고 여객운송용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짐, 화물이 아니고 여객운송용 광역전철이라고 하는데 남북철도가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화물열차도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용량이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남북철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 단계에서는 경제적으로 쌍방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상용열차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 아니, 상용열차인데 사람 싣는 여객운송용, 1차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거 다 같이……
**○김영숙 위원** 그런데 경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려면 화물용의 운송도 되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것이 지금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김영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최성입니다.

저는 6자회담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또 지원하면서 남북 관계의 병행 추진을 하고 있는 통일부의 신중한 실사구시적 접근은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병행 추진의 와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극성은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보고를 받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는 과거 장관급회담을

하시러 가실 때도 제가 강력히 요청을 했고 그 이후 경의선 열차 시험운행 이런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의지가 확고하고 또 북측이 수차례 약속한 사항인데 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이나 남북실무회담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북측의 약속 불이행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의 부재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난번 회담에서 저희들이 아주 역점을 두었던 것은 핵 실험 이후에 단절되었던 남북대화를 정상화시키고……

**○최성 위원** 장관님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 것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의제로 삼을 여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정부의 의사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의사를 분명히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충실히 그것을 이행해 나갈……

**○최성 위원** 장관님, 그런 식의 뒤의 실무자들이 써 준 답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미 의사를 표현했고 남북 간의 합의 사안이고 그것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면 저는 당연히 장관급회담이든 또는 실무회담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

**○최성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오는 4월 18일부터 있을 경추위 회의에서 경의선 열차 시험운행 논의가 될 텐데 경의선 열차 시험운행 과정에서 경의선을 통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요구를 강력히 제안할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먼저 “실무자의 것을 가지고 하니까 무책임하거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뵙고 방북 의사가 어떠신지, 어떤 절차를 밟는 게 좋은지 직접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도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적절한가도 대략 공식·비공식적으로 북측하고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가시는 것이……

**○최성 위원** 공식·비공식적으로……

**○통일부장관 이재정** 잠깐만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1차 정상회담을 만들어 내시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해 오신 분으로서 대단히 비중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히 저희가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진작 장관님께서 그 사안이 갖는 중차대성을 감안해서 공식·비공식적으로 북측과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질의를 안 드리지요.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한 결과 어떤 형태의 추진이 가능합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런 논의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의미 있게, 비중 있게 남북 당국 간에 공식·비공식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장관님 또는 통일부의 답변이 항상 통외통위나 남북관계특위에서 나오는 일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혜와 평화에 대한 의지가 활용될 수 있기를 제안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겠습니다마는 배기선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나라당이 최근에 대북정책의 수정·전환 가능성을 논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아직 그렇게 높은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든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방북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평화통일특위 또는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방북을 통해서 북핵 폐기 또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정부가 적극 나설 용의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문제는 그야말로 국회 쪽에서 여야 간에 초당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루어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하신다면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최성 위원** 오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 대전민주평통에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은 국가원수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치권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당연히 국회가 국익적 차원에서 정책적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장관님께서 얼마든지 그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어떤 맥락에서 하신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연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에게 하나의 참고로 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나 정치적 뜻으로 해석되거나 또는 그것이 폄하되거나 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상회담이 갖는 가치와 의미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성 위원** 이해찬 전 총리께서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을 고려해야 된다…… 이 제안은 이해찬 전 총리 개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서 정부 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부와 이해찬 전 총리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일이 전혀 없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해찬 전 총리께서 높은 정치적 견해로 제안하신 개인적 의견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이해찬 전 총리가 제안하기 훨씬 이전에 이 자리 통외통위에서 장관님을 상대로 남북 그리고 미북…… 즉 4개국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북핵 폐기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제안을 제가 드린 바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실제 4개국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의미 있는 프로세스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실천된다면?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물론 실천된다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2·13 합의의 초기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야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논의될는지 하는 것은 아직 정부로서는 판단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이해찬 전 총리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방북은 장관님 말씀처럼 정치인의 방북이고 또 다양한 차원에 있어서의 교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이후에 불필요한 특사 논란으로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었다고 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 성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통일부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 부에 전달해 주신 내용으로는 대체로 지난번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 가운데 가능하면 이런 일들은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전달해 주셨고요. 대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내용들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이번 BDA 송금 지연 문제의 실체가 실제 중국이 부담스러운 북한의 자금을 받는 과정에 대한 입장의 불분명한 표명입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요. 다만 외환의 이체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에 대한 문제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북핵 폐기와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정치권의 대북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수정 움직임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단히 중차대한 의미를 보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방북이 무산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와 있는데 실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는 실제 정형근 의원께서 우리 부에 방북 신청을 하거나 또는 방북에 관해서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최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라당의 기존 대북정책에 대해서 통외통위든 여러 기회를 통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청와대가 나서서 미묘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깊숙이 관여하면서 왈가왈부하는 토론도 결코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를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이 "반성 없는 무임승차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성 위원** 보지 못하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예민해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그것을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최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과거 한나라당이 대선에 개입할 시도가 있을 때 장관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고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도 사실은 협상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우신데 북측에 남쪽 대선에 관여할 시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이 특정 정당의 대북정책 수정에 대해서 또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 이런 접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남북 관계 발전이나 혹은 남북대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측이 이런 일들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행동을 중지하기를 바랍니다.

**○최성 위원** 지금 힐 대표가 "연내에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통일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북측에 관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 핵 폐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교하게 행동 대 행동으로 엮여 있는 것이고 6자가 균등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각자의 책임 한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성급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는 이런 일들이 6자의 공동합의 아래, 적어도 국제사회의 공감대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6자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그런 발언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6자회담 이런 한반도 평화 지형의 혁신적·혁명적 전환의 핵심은 일방적인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추진했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해외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국내든 구체적인 현실적 대북 인식에 기초하지 않는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북미 관계의 급진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진전되리라고 보는데 북미 간의 진전, 북미 간의 수교 또는 연락사무소 개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관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현재 북미 대화가 북미 워킹그룹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가졌었고요. 앞으로 이것이 진전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발전되어 나가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 북미 외교관계의 정상화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북핵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아무튼 6자회담의 성과에 관망자적인 입장에 머물지 마시고 그 공간 속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셔서 남북정상회담이 대선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가 있기를 바라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는 단순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대단히 중요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箕 委員** 한나라당의 서상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재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전에 송민순 장관께서 "북한은 골치 아픈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전후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적절한 답변이었는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러시면 전후 맥락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리고 보고자료 2페이지의 '북핵 문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천 노력 지속 촉구'의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우리 측 수석대표 면담 시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임을 강조하며 핵 문제 해결 노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임을 강조했다'는 이 문구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날 직접 제가 김영남 위원장과 담화를 나누면서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徐相箕 委員** 저는 북한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북한의 고위층에서 얘기할 때 김일성의 유훈임을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측 대표들이 북한 대표하고 대화나 협상을 할 때 이 말이 들어가면 비중이 있는 것이고 안 들어가면 비중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시나요? 저는 지금 북한 사정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하는 것을 북쪽에서 상당히 강조들을 해 오고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徐相箕 委員** 중요한 것은 우리 쪽에서, 장관님 개인 입장에서라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시느냐…… 이 문구가 들어 있는 것하고 안 들어 있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강도라든지 신뢰도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徐相箕 委員** 그러시다면, 신뢰가 있다고 보시면 지금 국민들이 북핵 문제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

**○徐相箕 委員** 기존의 핵무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徐相箕 委員** 그러면 가동 중지, 불능화를 넘어서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 문제까지도 다 다루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제대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2·13 합의문을 잘 보게 되면, 2·13 합의는 9·19 합의를 행동대 행동으로 실천해 내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13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의 전체적인 폐기를 위한 하나의 과정을 만들고 그것을 행동 대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핵 폐기라고 하는 목표로 가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徐相箕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기존의 핵무기 문제는 애써서 서로가 피해 가고 있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고 있는 이 부분이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고요. 2·13 합의 이후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3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19 합의를 시행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핵 폐기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장관급회담에서도 궁극적인 목표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는 것에다 아주 역점을 두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으레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분명하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알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리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 방북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 문제가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에 순서가 있는 것입니까? 순서와 경중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두 문제가 다 상당히 높은 정치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가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요.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는 이미 북쪽에서 초청할 의사를 밝힌 바가 있었고요. 이것이 도중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아직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회담이 선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은 정말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이익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유용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정상 간의 하나의 대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정부로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든 6자회담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낼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徐相箕 委員** 그러시다면 장관께서는 두 가지다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徐相箕 委員** 그렇다면 여건이 성숙되면 금년 내로 두 분의 방북을, 정상회담과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둘 다를 여건만 성숙이 되면 금년 내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신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나의……

**○徐相箕 委員** 장관께서 판단하시기에……

**○통일부장관 이재정** 우리가 이것이 금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

**○徐相箕 委員** 여건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여건이 된다는 것은 곧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 상황을 놓고 생각해야지 제가 미리 예단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徐相箕 委員** 이왕이면 아주 판을 크게 벌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徐相箕 委員** 그리고 북쪽에서 평소에 그 사람들은 항상 외교적인 관례나 이런 것하고 아주 거리가 멀게 발언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대선하고 관련되는 이야기를 부쩍 여러 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하셨다고 그랬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장관님이 항의하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장관님이 진정으로 항의를 하셨고 듣기에 정말 대단한 항의이고 그대로 이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이게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가 기조발언문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공식적인 항의를 문서로 만들어서 한 바가 있고요. 또 다른 사석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것이 결코 남북 간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전했고요. 이런 것을 지키도록 저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얘기는 다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徐相箕 委員** 효과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통일부장관 이재정** 앞으로 더 두고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徐相箕 委員** 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발언이 한나라당을 향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저 서류상으로나 구두로 한번 항의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북쪽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보기에 아무튼 한나라당이 지금 대북정책에 대한 전환·변화 이것도 고려하고 계시고 제가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변화가 있다면 더더군다나 이것은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徐相箕 委員** 그런 한나라당의 정책 변화도 중요하지만 저는 장관님의 대북 자세랄까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 의지는 아주 단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예, 확실하게 그야말로 그쪽에서…… 중요한 것은 장관님이 단호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단호하다고 느끼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기준은 그쪽에 있는 것이지 장관님이 아무리 단호하게 하셨다고 해도 그런 것이 반복이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단호 안 한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오영식입니다.

최근에 2·13합의와 한반도 주변 정세가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급변하고 또 그 변화의 폭과 깊이가 매우 크다라고 대체적으로 평가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미국이 가져왔던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기조가 바뀐 것 아닌가,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라크 내전과 관련해서 안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부담이나 직접적으로는 작년 11월의 중간선거 결과 또 내년 대선을 앞둔 이러저러한 고려 등등이 다 포괄적으로 고려된 것 같은데,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정책기조가 근본적 변화들을 실질적으로 갖고 상당기간 이러한 기조가 잡혀 나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도 지금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이 작년 부시대통령의 종전선언의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발언을 이후로 해서 상당히 변화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역시 미국 내에서는 여론정치이기 때문에 미국의 여론이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를 상당히 주시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점들은 역시 우리 국내의 입장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남북관계의 보다 더 확고한 관계개선과 확고한 발전이 결국 북미관계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의 정책을 변함없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식 위원** 장관님께서 답변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런 대북정책기조에 변화가 있지만 현재의 과정은 다른 한 측면으로 대단히 깨지기 쉬운 취약한 구조적인 측면들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로까지 발전시키려면 이 과정 속에 남북관계가 거기에 병행해서 전면적으로 확대·발전되고 이 국면전환에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은 강력히 제기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6자회담의 결과에 따른 합의이행조치의 과정들을 지켜보고 병행해서 추진하되 빠르면 빠를수록 정상회담의 의미나 효과는 크지 않겠는가, 그러한 여건 마련을 위해서 정부 담당부처로서 지금보다는 보다 좀 많은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 부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보다 더 발전적인 단계를 모색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잘 발전해 나간다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변화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5월 29일에 열릴 예정으로 있는 제21차 장관급회담을 앞두고 지난번 회담 때 약속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변화의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중요한 것은 역시 신의를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먼저 복원해야만 다른 문제들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영식 위원**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6차 6자회담이 BDA 자금 문제로 휴회가 돼 버렸는데요. 물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파악을 해 보면 이게 어느 측의 고의적 과실은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식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중대한 사안들을 처리하는데 절차상·기술상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우려하면서도 낙관적인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통일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이 문제가 원만히 타결돼서 기왕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합의이행 과정과 북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더더욱 발전될 수도 있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런 상식적 관점에서 갖는 우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에 이 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기술적으로 절차상에 예기치 못했던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일이라고 보고요. 현 단계에서는 어떻든 이것을 빨리 해소를 해서 기왕에 합의됐던 2·13합의조치의 초기단계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성실하게 6자가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식 위원** 지금 2·13합의 초기이행시한이 4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오영식 위원** 지금 관련 당사국 간의 합의사항들이 크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거나 현실화시킬 필요성 내지는 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문제는 통일부장관이 답변할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야말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고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것은 정상이 직접 판단하고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나 한반도 주변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이 자리에서 제안 내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남북특위를 좀더 확대 개편해서 그 역할과 활동을 대폭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남북특위 내에 4개의 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구체적인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합의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것과 맞물려서 남북관계가 발전한다면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경제협력들이 보다 전면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교류협력사업들도 대폭 확대될 가능성과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 개성공단사업소위 같은 경우에도 개성공단사업소위로 한정할 문제가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을 내다보면서 에너지교류사업이라든가 기타 경제협력사업을 국회 차원에서, 특위에서 좀더 다각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해서 활동하는 등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정당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나라당의 참여가 없어서 그 의미가 반쪽이 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느 정당에서 먼저 제안했느냐, 누가 어떻게 제안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또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의 과정들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과정에 국회가 객체화된다거나 소외되거나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제정당연석회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연석회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남북문제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기해 나가겠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도 내고, 또 국회 차원의 교류협력이나 대화 그리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방북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문제나 또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모색하는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특위가 적극적으로 주동을 해서 현실적으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중요한 남북문제 그리고 평화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지혜와 노력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아주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신 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전문가적인 아주 높은 식견을 가지신 이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위원** 몰라서 묻겠습니다.

2·13합의에 몇 가지 북핵 폐기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르면 연내에 어디까지

가게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연내라고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60일 초기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2단계로서 핵시설 불능화 또는 북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능화의 단계와 함께 이때 핵 프로그램과 핵의 모든 것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고 여기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는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낙연 위원** 적어도 연내에 불능화 단계까지는 가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위원** 부시정부 임기 내에 북핵 폐기까지를 시킬 그러한 자세라고 보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위원** 그것은 당위시고 보시기에, 분석하시기에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 이해로는 미국도 북측도 그리고 중국도 대략 그런 기본적인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위원** 2월에 아미티지보고서라는 게 나왔었어요. 아실 겁니다, 아마?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이낙연 위원** 나이 교수랑 함께 쓴 건데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의 경우를 상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투의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했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2·13합의를 두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런 것인가, 그리고 부시정부가 정말로 북핵 폐기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 문맥을 어떻게 보세요? 아미티지보고서와 2·13합의에 갭이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미티지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케이스를 생각해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유용한 비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핵에 대한 폐기, 핵에 대한 완전한 문제 해결 이것은 곧 북의 안보문제에 대한 해소일뿐만 아니라 안보문제의 해소는 결국 북미 관계의 외교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외교적 관계의 정상화로 볼 때 그동안에 가령 리비아의 케이스나 베트남과의 외교적 정상화나 이런 것을 본다면 빠르게 진행된다면 2년 내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역시 미북 관계도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위원**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핵이 폐기될 것으로 보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결국 그것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위원** 지금 6자회담이 휴회 중입니다. 속개는 언제쯤 될 걸로 보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속개는 BDA자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체로 지금 여러 사람들의 견해로 보면 이것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다시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낙연 위원** 김계관 부상이 북으로 가버리면서 특별히 한 얘기 같은 것 있었나요? 별로 보도가 안 되고 있던데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특별한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낙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이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성 위원님 하시고 나서 심재엽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최성 위원님!

**○최성 위원** 장관님께서 정상회담 관련한 발언을 하신 언론보도와 별도로 송민순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 입장인 것 같고 아마 장관님도 이런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주무장관이시고 논의도 했었으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남북정상회담의 바람직한 방향은 한반도가 비핵화하는 데 순기능을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상황과 조건이 이루어지면 정상회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어떤 시기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에 가까운 것이지요?

주무부처 장관이신 장관님 견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그렇지요? 장관님이 그 자리에서 계속 해 오셨던 입장인데…… 정상회담 이야기만 나오면 막 불안하십니까? 말씀 한마디 잘못하시면 뭐 크게 일파만파 날까봐……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성 위원** 이것이 현 단계에서 상황과 조건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왔잖아요? 북핵 문제, 6자회담이 진전되고 북한 핵 폐기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실제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생각하는 남북정상회담의 적절한 조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 정상회담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틀에서의 조건도 있고요, 혹은 그 정상회담이 열릴 당시의 어떤 상황적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규정적으로 '이런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남북관계의 가장 어려운 틀 가운데 하나가 북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3대 장벽도 하나의 조건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남북 간의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적어도 남측이 북측에 제시한 여러 가지 과제들, 이러한 것들의 원만한 관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러한 어려운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 역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건이 충족된다고 할 때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일이지 단정적으로 '이런 조건이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성 위원** 그런데 장관님, 제 생각에는 차제에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일정한 조건이나 어떤 여건에 대해서 좀더 분명한 원칙을 국민 앞에 천명하고, 또 가능하면 저는 초당적인 형태의 어떤 방북단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나오지 않게 해주어야지 대통령의 계속된 말씀, 시기적인 상황마다 나온 이야기…… 그런데 실제로는 장관님 말씀하신 그런 이면의 흐름이 있을 경우 괜히 불필요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왜냐하면 제목들이 다 남북정상회담 계획 안에 이러신단 말이에요, '빠를수록 좋아', '추진', '적극 검토'…… 이런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료한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방하시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평통에서, "북미 수교 전에 서울과 평양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대언론용으로는 답변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뭐 또 너무 앞서가는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북미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급진전되기 전에 남북관계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와 수준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문제도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전혀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북미 관계를 북미 관계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남북관계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이 상설 사무소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 놓고 연구하고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장관님께서 아까 제가 상당히 비중있게 드린 질의에 대해서 보시지 않았다고 해 버리니까 질의의 맥이 풀렸던 내용인데……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서, 오늘 가셔서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강도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옮기면 또 자칫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분개하실 테니까…… 이런 비판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이나 여러 제 보수적인 진영은 물론이고, '진정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변화한 거냐?', 그것은 강경한 대북봉쇄정책을 추진하는 그룹에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 것이고 저를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정책에 대해서 일관된 신념을 가진 분들도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언론을 통해서 나온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수정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우리가 정치권의 어떤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논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 현 단계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별로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고요. 남북관계나 이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긴 안목에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한 그런 아주 단호한 절차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나라당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리거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면 청와대에서요, 저도 DJ정부하의 청와대에 있었지만, 미묘한 외교안보 사안이나 또는 국회 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를테면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수정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기회가 되면 맞장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도 높은 비판적 반론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이 나서서 특정 정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논박을 해 버리면 논란의 초점이 전혀 다른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나 주무부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텐데,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한번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아무튼 저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야 될 몫이 있고요, 정부가 해야 될 몫이 있고, 국회 내에서 각 정당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 봅니다. 그 모든 것을 청와대가 역량과 상관없이 관계하는 것은 오히려 제대로 된 당론구조의 왜곡화된 형태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저는 이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기 방식들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최성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비서실이나 혹은 대통령의 보좌진들도 일정한 틀의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 정치행위는 결국 그 내용이 어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상 절차에 대한 문제를 하거나 어떤 제한적으로 따질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상 지금 이 2·13 합의를 지켜 나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와 노력이 아주 필요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 판단은 정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장관님 저도 한 말씀 올릴게요.

청와대가 어떤 정치 현안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장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이 논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이를테면 굳이 이 국회 상임위 자리에서 언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저는 합리적인 토론 구조나 비판적인 이런 토론 문화의 왜곡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런 점을 보셔서 그 범위가 벗어난 것이라면 비단 이 논평만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지만 바로 그것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국제사회의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논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엽 위원** 존경하는 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입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 거기에 대한 장관 답변이 '진정성의 문제이고 판단은 국민이 한다', 저는 장관 답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의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한 비난이 손학규 지사 탈당 관련 등등해서, 이게 계속적인 대선 선거 개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앞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서 대선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다른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방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차원의 방북에서 나온 대화 중에서 정부정책하고 다른 어떤 제안이 있었다거나 이럴 경우에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처를 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가 방북한 다음에 민간단체나 혹은 민간기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정부의 의사와 반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자기 개인적인 혹은 그 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는 존중을 합니다.

단, 이것이 남북관계를 저해하거나 혹은 남북대화에 반하는 일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정책하고 다른 그런 경우에도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표명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뭐 입장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누구든지 그런 정책을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들이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갈 그런 입장입니다.

**○심재엽 위원** 이해찬 전 총리께서 북한을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북한에 가서 나누는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통일부하고 사전에 조율한 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내용에 대해서 조율을 하지 않습니다만 방북하게 되면 방북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가서 누구누구를 만난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기 때문에 대략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가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또 다른 면으로도 저는 이해찬 전 총리께서 이번에 가시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동북아평화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그 당의 입장에서 가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재엽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우리 강원도민과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열망하는 그런 올림픽 이벤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심재엽 위원** 지금 IOC 위원회에서 경기장 간의 어떤 거리라든가 또 선수촌과 경기장의 거리가 30분 이내로 선수 중심의 이런 올림픽을 주장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문화관광부라든가 유치위원회라든가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께서 좀 엉뚱한 제안을 하셨는데, 남북 공동개최를 제안하셨거든요, 북한에 가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올림픽이 선수 중심의 경기원칙에 의해서 경기장 간 거리라든가 또 선수촌과 경기장 거리가 30분 이내이어야 되는데 '남북한 공동개최다' 그러면 오히려 올림픽 유치에 나쁘게 말하면 재를 뿌리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국익에 저해되는 그러한 발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통일부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련된 정부와 유치위원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 장관급 회담을 하면서 전체회의에서 "강원도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북과 남이 공동으로 있는 이 강원도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북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서 평화의 올림픽이 한반도에 이루어짐으로써 남북 간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좀 밀어 달라" 하는 부탁을 제가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심재엽 위원** 원론적으로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동개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의 말씀은 뭔가 전달이 잘못되었거나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은 본래 개최하는 도시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지 공동개최라는 말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혹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그 주최하는 도시가 이것을 몇 군데로 분산해서 운영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것을 잘 아시는 이해찬 전 총리께서 공동개최라는 말을 하셨으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와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재엽 위원** 그런데 개최도시가 경쟁관계가

있고, 또 이해찬 전 총리가 바로 직전 총리였었기 때문에 그분의 발언을 경쟁도시에서 역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공동개최는 우리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셨으면 어떨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할 용의…… 만약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바로잡을 용의도 있고요.

**○심재엽 위원** 그것은 확실히 보도가 되었고……

**○통일부장관 이재정** 장웅 IOC위원장도 전부 오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한번 제가 문화관광부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해 보고 본인인 이해찬 전 총리께도 문의해서 만일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하겠고요. 제 짐작으로는 절대로 이해찬 전 총리께서 이것을 모르고 잘못을 하셨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합니다. 뭔가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재엽 위원** 어쨌든 그것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7월 4일 결정되기 전에 제가 볼 때에는 빠른 시일 안에 정부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는 것이 경쟁도시에서 이용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께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무튼 저희 입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요. 심지어 저는 오늘 안 달고 나왔습니다마는 평창 배지도 제가 달고 다니려고 애를 쓰고 저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외국의 대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래서 공동개최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알겠습니다.

**○심재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심재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서상기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유념하셔서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통일부장관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사이 지금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는 해방 이후에 가장 급변하는 그런 변화를 보여 주어서 우리 국민들도 놀라고, 특히 외국 사람들도 아마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러한 전쟁으로부터 평화로 가는 그동안의 햇볕정책이라든지 평화번영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국회 차원에서, 또 통일운동을 하는 많은 국민들, 시민, 재야단체, 또 여야 간에 노력을 한 결과이겠습니다만 최근의 미국과 북한의 양 관계에 있어서 이 변화가 너무 급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 나갈지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통일부가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도 아마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국회도 이러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이런 상황의 제도라든지 법률적인 준비는 어떻게 제대로 잘 해야 되는지 더 철저한 준비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여야 간에도 우리가 그동안에 남북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차를 가지고 논란을 벌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정말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익을 지켜 내고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이룩해 내는 데 정말 진지하게 협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 가운데 아직도 과거 냉전시대나 또는 안보 중심적 가치에 치우쳐 있는 이런 분들에게 평화통일 지향적인 가치가, 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또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확실하게 확대되고 이것이 모아질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정당과 의원님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각 정당 연석회의라든지, 또는 여야 간에

정말 기탄없는 제도와 법 정비를 위한 그런 정책 간담회 또는 이 남북 간에도 우리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국회 간, 또 남북 간에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최성 위원님도 주장해 주신 초당적인 방북단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또는 외교 루트를 통해서 보면 부시 대통령은 내년 4월까지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템포를 좀 빠르게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함에 있어서 남북관계보다는 북미 관계가 주도해 나가는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경쟁관계에서 우리의 국익을, 또 국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몇 가지를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마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지적 사항은 사실 저희 통일부가 역점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근본적이고 원칙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과제고 바로 이 시점이 그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국회 남북통일특별위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지원과 지도를 받아 가면서 이 문제들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역시 국제관계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남북관계를 보다 더 확고한 위치로 발전시키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통일부로서는 남북관계의 각급 대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군사회담이라든가 혹은 보건·의료회담이라든가 사회·문화에 관련된 회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회담까지도 좀더 활성화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배기선** 하여튼 통일부하고 우리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는 같은 동업자로서 앞으로 더욱더 협력관계를 강화해서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우리가 뒤따라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말씀 겸해서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특위는 그동안에 4개의 특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성공단사업특위, 두 번째 보건·의료협력특위, 세 번째 농업기반조성사업특위, 네 번째 금강산관광·문화교류발전특별소위원회, 이렇게 4개의 소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제도라든지 법률적인 준비를 저희들이 특별히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위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아까 오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에너지문제가 아마 남북 간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여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이 에너지 문제에 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이 두 가지의 소위는 저희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 간사와 오영식 간사, 두 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통일부장관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한반도의 기후 변화, 소위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면서 전염병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협력특위에서 이 문제에 관한 남북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남남 간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연석회의도 추진해 나가겠지만 남북 간에도 국회 차원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위원장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심재엽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 그리고 최성 위원님, 지병문 위원님, 오영식 위원님 그리고 오늘 출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통일부장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북관계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

음 회의는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 위원(10인)**

김영숙 배기선 서상기 심재엽
안경률 오영식 이낙연 이상경
지병문 최 성

**○출장 위원(3인)**

정희수 진 영 천영세

**○청가 위원(2인)**

류근찬 장복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 희 권
전 문 위 원 허 태 수

**○정부측 참석자**

통일부

| | |
|---|---|
| 장 관 | 이 재 정 |
| 혁신재정기획본부장 | 조 용 남 |
| 정책홍보본부장 | 고 경 빈 |
| 남북경제협력본부장 | 김 중 태 |
| 사회문화교류본부장 | 양 창 석 |
|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 박 홍 렬 |